

한국 대학생의 복지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지역 5개 대학을 중심으로—

金 尚 均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차례>

- | | |
|-------------------|---------------|
| I. 서 론 | IV. 조사 결과의 분석 |
| II. 연구방법 및 이론적 배경 | V. 결 론 |
| III.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 VI. 부 록 |

I. 서 론

현대사회에서의 대학은 엘리트 양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당 정도까지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사회는 대학에서 배출된 젊은이들이 여러 분야에서 엘리트로서의 역할 수행을 원만하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엘리트는 지식의 소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만큼의 통찰력과 이성적 판단의 능력도 동시에 겸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흔히 지성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다.

국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모든 과정에서 엘리트들은 정책 결정자가 되거나 주요 정책 영향자로 부각된다. 그들의 정책 과정 참여가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도 아니며, 정책의 결정 요인으로서 엘리트들의 힘이 얼마 만큼 중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책 과정에 깊숙히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게 되며 또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받을 수 있다.

사회정책의 변수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¹⁾ 그들 중에서도 정책

* 이 논문은 1984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Harold L. Wilensky, "The Welfare State and Equali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1975, pp. xi-xvii.

결정자나 정책 영향자들의 이데올로기라는 변수가 갖는 중요성에 대한 평가는 대조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Daniel Bell의 이데올로기 종언론이 대두되었을 무렵 사회정책학에서는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이란 개념이 출현하였다.⁽²⁾ 그리하여 사회정책 과정에서 이데올로기라는 변수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으로 약화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1980년 대 이후 복지국가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되자 이데올로기 논쟁은 거세게 재현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사회정책의 결정이 근본적으로 선택이란 사실이 재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은 그만큼 증대되었다.⁽³⁾

우리나라의 장래 발전 목표가 복지국가의 건설이라고 합의를 수 있다면 그러한 목표 성취에 주요 관건이 되는 사회정책의 확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본다. 현 사회정책학의 수준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이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정책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현 대학생들의 복지의식을 분석하고 측정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복지의식의 조사는 몇 편이 있는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⁴⁾ 아니면 특수하게 영세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결과는⁽⁵⁾ 나왔어도 대학생만이 조사 대상자가 된 것은 없다. 한편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해졌던 일반적 의식에 관한 조사는 전반적 가치관이나 의식구조에 관한 조사 및 국가관과 정치의식 등에 관한 조사들이었고⁽⁶⁾ 복지의식에

(2) T.H.Marshall, "Social Policy," Hutchinson, London, 1965, 2nd eds, 1967, p. 89, Quoted in Katheen Jones et. al, "Issues in Social Policy,"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78, p. 1.

(3) Joan Higgins, "States of Welfare," Basil Blackwell & Martin Robertson, Oxford, 1981, p. 161.

(4) 金泳謨, "한국인의 복지의식," 일조각, 서울, 1980.

(5) 한국개발연구원, "빈곤의 실태와 영세민 대책", 1981.

(6) 金泰吉, '한국대학생의 가치관', 1964년 조사, 金泰吉著,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文音社, 1982, 洪承植(外), '한국대학생의 가치관' 아세아 연구 11권, 고려대 아세아 문제연구소, 1963, 朴準國(外), '한국대학생의 의식구조 연구', 통일논총, 제 1집 별책, 부산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78, 姜宗煥(外), '대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81-1 조선대, 1981, 朴容憲(外), '대학교육문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육연구 83-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1983, 洪大植(外), '한국대학생의 국가관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제48집, 1976, 宋錫祐, '대학생의 가치관 조사연구', 교육학연구, 22권 1호, 한국교육학회, 1984.

초점을 맞춘 연구는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대학생의 복지의식을 규명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며 부차적으로 그들의 상이한 복지의식을 결정짓는 몇 가지의 변인들을 발견해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및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설문지 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데 설문지는 부록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사항에 관한 질문 6개와 본 설문 18개로 구성되었다.

설문의 작성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복지이념이란 단어에 대한 개념 파악이 필요하게 되는데, 편의상 복지와 이념으로 분리하여 조명해 보기로 했다. T.H. Marshall 교수는 복지를 물질적 수단과 비물질적 목표의 복합체라고 정의하면서 그것은 富와 행복 사이를 잇는 축의 어느 한 지점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⁷⁾ 그러나 복지를 Masshall과 같이 추상적으로 정의내리기 보다 오히려 복지국가의 줄임말로써 파악할 때 그것의 의미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복지의 의미는 복지국가의 개념 파악을 통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복지국가란 단어에 함축된 뜻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의 평화상태, 경제 제도로서의 혼합경제 체제,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제도로서의 사회복지와 같은 네 가지의 최소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⁸⁾

두번째로 이념을 개인, 집단 및 문화의 특성을 규정짓는 사고방식이나 사고내용이라고 정의한다면 그와 같은 기본적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의 방향을 결정하는 심성의 바탕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 상이한 가치관에 따라 상이한 이념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된 복지와 이념을 연결시켜 생각하면 결국 본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주로 복지국가의 목표 및 내용 그리고 복지국가 실현의 수단 및 방법에 관한 가치관의 상이성을 대학생이란 특수 집단에 한정해

(7) T.H. Marshall, 'The Right to Welfare,' in Noel Timms & David Watson (eds.), "Talking about Welfare,"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76, p. 52.

(8) 金尚均, '이데올로기에 비추어 본 사회복지정책의 유형구분', 사회복지, 76호, 1983, pp. 42-3.

서 파악하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Piet Thoenes에 의하면 복지국가의 상이한 개념은 복지모형의 설명에서 나오는 비교와 대조적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것이다.⁽⁹⁾ 그가 말한 복지모형이란 이념의 동일성 및 상이성에서 파생되는 사회정책의 제 규범적 논리의 유사성 및 차이점을 수개의 집단으로 구분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복지모형을 만들어내는 이념적 갈등은 사회가치,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국가의 역할, 빈곤에 대한 개념, 국가 자원의 배분, 낙인(stigma) 문제, 사회적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국가 자원의 낭비 여부와 같은 6가지의 주요 이슈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¹⁰⁾

이상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의 18개 항목은 빈곤과 관련된 3개 항목, 의료문제와 관련된 2개 항목, 주택 및 토지와 관련된 2개 항목, 실업문제와 관련된 2개 항목, 청소년, 노인 및 장애자복지와 관련된 3개 항목, 교육과 관련된 1개 항목, 복지서비스 제공의 주체와 관련된 1개 항목, 사회가치와 관련된 2개 항목,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에 관한 1개 항목과 사회개혁에 관한 1개 항목 등 10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복지모형들은 2분법, 3분법 그리고 4분법에 기초한 것들이 있는데,⁽¹¹⁾ 본 연구에서는 極右, 中道右, 中道左 그리고 極左와 같은 4분법에 의한 복지모형에 따라 설문을 작성했다.

따라서 18개의 각 항목들 중 8번을 제외한 17개 항목들은 극우에서 극좌에 이르는 4개의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다. 8번 문항에 대한 설명은 뒤에 나오는 조사결과의 분석 시에 언급하기로 하겠다.

본 연구의 주 목적이 대학생들의 복지이념을 측정하는 것이었지만 부차적으로 복지이념의 상이성에 미치는 변수를 찾아내보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독립변수로 채택된 것들이 대학교, 전공, 학년, 성별, 출신교외의 소재지, 父의 경제적 수준, 父의 교육수준 그리고 종교였는데 이들 변수들을 일반 사항에 기재토록 응답자들에게 요청했다.

(9) Piet Thoenes, "The Elite in the Welfare State," Faber & Faber, 1966, p. 134.

(10) 金尚均, Op. Cit., pp. 47-8.

(11) Ibid., pp. 48-53.

III.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조사의 대상이 될 대학생을 표집하기 위해 우선 국내 4년제 종합 대학교들 중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를 선정했다. 이들 5개 대학교를 선정한 이유는 조사의 편의에 유리한 점과 이들 대학교 재학생들의 출신 고등학교의 지역적 상이성이 풍부하다는 점 그리고 대학생들의 소위 말하는 학생 운동이 비교적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으로 인해 타 대학교 학생들에 비해 이념의 표출이 상대적으로 선명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대학교를 선정한 후, 그 다음엔 대상 학생들의 학년을 1학년과 4학년으로 정했다. 2,3학년 학생들을 제외시킨 이유는 대학 생활 4년이란 기간 중에 나타나는 학생 개인의 성장 및 대학 교육이 그들의 복지이념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가설에 따라 그러한 차이를 보다 용이하게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해당 학교, 해당 학년 내에서의 표집은 일단 전공 학과를 가나다 순으로 배열시킨 후 각 학과의 학생 명단을 다시 가나다 순으로 정렬 시켜 1:40으로 표집하려고 했다. 그러나 예비조사 결과 동일 단과 대학 내의 전공 학과 별 복지이념의 차이는 무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전체 표집 비율을 1:40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각 단과 대학의 전체 표집 수만 정하고 해당 단과 대학 내에서의 표집은 그 대학 내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은 3개 학과만을 선정하여 3개 학과의 학생수 비율에 따라 각 학과 당 표집 수를 최종 결정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자의 총 수는 1,096명이 되었고 이들에 대해 설문지가 배포되었다. 설문지의 회수 결과 885매가 집계되었지만 자료의 처리 과정에서 분석 불가능한 33매를 제외한 852매가 최종 분석에 사용된 것이다.

응답자 852명의 학교별 구성을 보면 <표 1>, 서울대 학생이 205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이화여대 학생 189명, 고려대학생 165명, 연세대학생 153명, 끝으로 성균관대학생 140명 순이다.

전공별 분포는 <표 2>와 같이 반이 조금 넘는 454명이 문과였고 이과는 313명으로 36.7%, 그리고 예, 체능계는 10%인 85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1〉 응답자의 학교별 구성

학 교	표본수	백분율
서 울 대	205	24.1
연 대	153	18.0
고 대	165	19.4
성 대	140	16.4
이 대	189	22.2
합 계	852	100.0

〈표 2〉 응답자의 전공별 구성

전 공	표본수	백분율
문 과	454	53.3
이 과	313	36.7
예 · 체 능 계	85	10.0
합 계	852	100.0

〈표 3〉 응답자의 학년별 구성

학 년	표본수	백분율
1 학 년	480	56.3
4 학 년	372	43.7
합 계	852	100.0

〈표 4〉 응답자의 성별 구성

성	표본수	백분율
남	538	63.1
여	313	36.7
무 응답	1	0.1
합 계	852	100.0

〈표 3〉은 852명의 학년별 구성인데 56.3%인 1학년이 480명이었고 나머지는 4학년이었다. 이들의 성별 차이는 〈표 4〉에 나와 있듯이 63.1%인 538명이 남학생이었고 36.7%인 313명이 여학생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출신고교의 소재지는 56.2%가 서울 출신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20.4%가 중소도시, 그리고 14.9%는 대도시에서 유학온 학생들이었다. 또한 7.7%는 군, 읍 소재지의 고교 출신이었다(표 5).

〈표 6〉은 조사에 응답한 학생들이 판단하는 父의 생활 수준에 관한 것인데, 절대 다수인 76.9%가 중산층에 속한다고 답했고, 17.5%는 저소득층으로 봄으로써 부유한 가정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4.2% 밖에

〈표 5〉 응답자의 출신고교 지역별 구성

출신 지역	표본수	백분율
서 울	479	56.2
대도시(부산, 대구, 광주, 인천)	127	14.9
중 소 도 시	174	20.4
군 · 읍	66	7.7
무 응답	6	0.7
합 계	852	100.0

〈표 6〉 응답자의 父의 생활수준별 구성

생 활 수 준	표본수	백분율
상	36	4.2
중	655	76.9
하	149	17.5
무 응답	12	1.4
합 계	852	100.0

〈표 7〉 응답자의 父의 교육수준별 구성

교 육 수 준	표본수	백분율
무 학	13	1.5
국 졸(퇴)	67	7.9
중 졸(퇴)	81	9.5
고 졸(퇴)	189	22.2
대졸(퇴)이상	484	56.8
무 응답	18	2.1
합 계	852	100.0

〈표 8〉 응답자의 종교별 구성

종 교	표본수	백분율
불 교	99	11.6
기독교	222	26.1
천주교	83	9.7
무	420	49.3
기 타	20	2.3
무 응답	8	0.9
합 계	852	100.0

되지 않았다.

한편 〈표 7〉이 보여주고 있는 父의 교육 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대졸 이상이 56.8%였으며, 그 다음이 고졸 22.2%, 중졸 9.5% 그리고 국졸 7.9%의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학생들의 종교는 〈표 8〉과 같이 절반이 없다고 응답했고, 종교를 믿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기독교가 제일 많아 전체의 26.1%였으며, 그 다음이 11.6%의 불교이며, 세번째는 천주교의 9.7%였다.

조사는 1984년 6월 5일의 예비조사가 끝난 후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제 1차 본 조사를 실시했다. 완료되지 않은 부분을 위해서 여름방학이 끝난 후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 2차 본 조사를 실시했다.

IV. 조사 결과의 분석

서론에서 언급되었다시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복지이념을 측정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 목적이었으며, 부차적으로는 복지이념의 결정 변수를 발견해보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본 조사의 18개 설문 항목들 중 8번을 제외한 나머지 17개는 각기 이념의 극우, 중도우, 중도좌 그리고 극좌에 해당하는 질문 한 개씩 총 4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는 점도 이미 설명되었다.

복지이념의 측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극우는 1점, 중도우는 2점, 중도좌는 3점 그리고 극좌는 4점의 가중치를 주기로 했다. 설문 8번은 右에 속하는 가치 7개와 左에 속하는 가치 7개 등 총 14개를 제시한 후 이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3개를 선택하도록 요구했던 것이다. 그 결과 분석

에서는 右에 속하는 가치 3개가 선택되었을 경우 극우로 보고, 右 2, 左 1 개면 중도우, 右 1, 左 2개면 중도좌, 그리고 左의 가치 3개면 극좌로 간주하기로 했다.

원래 복지모형은 각각의 상이한 모형이 상호배타적으로 구분되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 상대적인 비교 개념으로서 이데올로기의 연속선 상에 갖가지 모형을 위치시킨 것이었다. 따라서 2가지 이상의 설문에 관한 종합적 복지이념의 판단에서는 평균 점수가 1점에서 1.75점 사이에 있으면 극우에 속하고, 중도우는 1.76~2.5점 사이, 중도좌는 2.51~3.25점 사이 끝으로 극좌는 3.26~4점 사이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총 842명의 응답자들이 18개 항목에 걸쳐 표출한 복지이념의 전체 평균치는 2.746으로 집계되었다. 이 점수는 2.51에서 3.25 사이의 중도좌에 속하는 것으로 중도좌 중에서도 극좌(3.26~4.00)보다 중도우(1.76~2.50)에 접근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복지이념은 온전한 중도좌에 속한다고 하겠다.

항목 별 평균치를 고찰해보면 18개 항목들 중 1개항이 극좌에 속하고 12개항이 중도좌에 위치했으며 나머지 5개항은 중도우에 속함으로써 극우에 소속된 항목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좌에 속한 1개 항목은 <표 9>에서와 같이 평균 3,507을 기록한 현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의 정도에 관한 질문이었다. 예산이 극히 부족하다고 평가한 극좌의 성향을 나타낸 대학생들이 전체의 61.0%였는데, 61.0%는 18개 전체 항목들에서 극좌가 얻은 비율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다. 복지예산이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중도좌는 31.5%의 지지를 받았고, 적정 수준

<표 9> 현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 정도

가 중 치	구 분	표 본 수	백 분 율
1	과 임 지 출	27	3.2
2	적 정 수 준	35	4.1
3	약 간 부 족	268	31.5
4	극 히 부 족	520	61.0
0	무 응 답	2	0.2
합 계		852	100.0
평 균 점 수		3,507	

〈표 10〉 의료 보장의 방법

가증치	구분	표본수	백분율
1	개인의 책임	9	1.1
2	국민자만 국가가 책임	79	9.3
3	국가에 의한 의료보험 실시	500	58.7
4	조세에 의해 누구에게나 무상공급	262	30.8
0	무응답	2	0.2
합계		852	100.0
평균			3.194

으로 보는 중도우가 4.1%, 과잉 지출이라고 판단한 비율은 3.2%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온 국가정책의 주 목표가 경제성장과 경제개발에 편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중도좌에 속하는 12개 항목들 중 극좌에 가까운 경향을 보인 것이 〈표 10〉과 같은 의료보장의 방법에 관한 질문이었다. 평균 점수는 3,194였는데, 국민자만 국가가 책임지는 중도우가 응답자의 9.3%, 전적으로 개인 책임으로 보는 극우가 1.1%였음에 반해 58.7%가 중도좌에 속하는 국가에 의한 전국민 의료보험의 실시를 원했고 30.8%는 극좌의 영국식 국민보건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7년 이후 실시되고 있는 현행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방금 설명된 의료보장의 방법에 못지 않게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한 항목이 〈표 11〉의 빈곤 원인에 관한 시각이었다. 평균치 3,188의 점수가 나왔는

〈표 11〉 우리나라의 빈곤 원인

가증치	구분	표본수	백분율
1	개인의 동기부족, 나이, 무결재	38	4.5
2	가구주의 사망, 질병, 저학력, 청년퇴직	16	1.9
3	저임금, 고용기회부족, 사회보장제도미발달	543	63.7
4	자본주의의 내재적 모순	252	29.6
0	무응답	3	0.4
합계		852	100.0
평균			3.188

데 응답자의 63.7%가 중도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제반 사회복지제도의 미성숙을 빙곤의 원인으로 보았고 자본주의 모순의 결과로 인식하는 극좌의 비율이 29.6%였다. 그리고 빙곤의 원인을 개인의 부정적 속성과 부도덕에서 찾으려는 극우는 4.5%로 집계되었으며 개인 차원에서의 불가항력적 요소를 빙곤의 원인으로 보는 중도우의 성향은 1.9%였다.

전체 18개 항목의 설문들 중 네번째로 높은 평균 점수를 얻은 항목은 정부의 영세민 대책의 목표에 관한 것이었다. <표 12>에서 보는 바대로 평균치는 3.012였는데 극좌에 속하는 소득분배의 불균형 개선을 주 목표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견해가 전체의 49.2%인데 반해, 취업기회의 확대와 같이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중도우가 23.1%였으며 극우에 속하는 자립의지 조성이 12.4%를 기록했다. 특히 최저 생계의 유지와 같은 복지권을 인정하는 중도좌에 속하는 비율이 14.7%에 지나지 않은 현상은 영세민 대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견해가 타 설문 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극화 현상을 많이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립의지 조성을 주 목표로 보는 견해가 높게 나온 것은 우리나라의 기존 영세민 대책의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정부의 시책내지 홍보 활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표 12>의 빙곤대책을 앞에 나온 <표 11>의 빙곤원인에 대한 인식에 견주어볼 때 원인분석이 대책수립 보다 더 좌편으로 기울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평균치 3.0 미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항목은 <표 13>에 나타난 사회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였다. 절대 다수인 76.3%가 중도좌에 속하는 점진적 사회개혁을 주장했는가 하면 개혁 보다 혁명을 택한 극좌의 응답

<표 12> 정부의 영세민 대책의 주목표

가 증 치	구 분	표 본 수	백 분 율
1	자립의지 조성	106	12.4
2	취업 기회 확대	197	23.1
3	최저 생계 유지	125	14.7
4	소득분배의 불균형 개선	419	49.2
0	무 응답	5	0.6
합 계		852	100.0
평 균			3,012

〈표 13〉 사회 개혁의 필요성

가 증 치	구 분	표 본 수	백 분 율
1	사회개혁 불필요	3	0.4
2	약간의 사회개혁 필요	104	12.2
3	장기간 점진적 사회개혁 필요	650	76.3
4	사회개혁보다 사회혁명 필요	94	11.0
0	무 응답	1	0.1
합 계		852	100.0
평 균			2,981

자가 11.0%였고 약간의 사회개혁을 원하는 중도우가 12.2%였음에 반해, 사회변동을 전혀 원하지 않는 극우가 0.4%의 지지율을 획득함으로써 평균 점수는 2,981이었다. 극우의 0.4%는 전체 18개 항목에 걸쳐 극우가 얻어낸 비율들 중 가장 낮은 수치인데, 전반적으로 볼 때 대학생들의 사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강함을 반영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평균치 2,975를 얻은 장애자 및 노인복지의 방안에 관한 〈표 14〉이다. 응답자의 85.8%가 장애자 고용 촉진법이나 퇴직금 제도 등 사회 지원 체제의 필요성을 실감함으로써 중도좌의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 외에 6.6%는 중도우의 자선사업 확대를 원하고 있으며 6.1%는 극좌에 속하는 무상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0.8%만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극우의 성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사회적 보호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 빈곤자들(the deserving poor)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을 불만스럽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14〉 장애자 및 노인복지의 방안

가 증 치	구 분	표 본 수	백 분 율
1	개인의 책임	7	0.8
2	자선사업의 확대	59	6.9
3	장애인 고용촉진법이나 퇴직금제도	731	85.8
4	조세에 의한 무상서비스 확대	52	6.1
0	무 응답	3	0.4
합 계		852	100.0
평 균			2.975

〈표 15〉 무주택자의 주택문제 해결방안

가중치	구 분	표본수	백분율
1	정부 개입 불필요	13	1.5
2	정부용자를 통해 자가 소유자를 증대	223	26.2
3	부담능력이 약한 사람부터 정부의 유료 임대 주택 공급	383	45.0
4	부담능력이 약한 사람부터 정부의 무상 임대 주택 공급	228	26.8
0	무 응답	5	0.6
합 계		852	100.0
평 균		2,975	

〈표 15〉는 무주택자의 주택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의식인데 평균 점수는 2,975로 나왔다. 응답자들 중 제일 많은 45.0%가 중도좌의 대책인 정부 재공의 유료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무상 임대 주택의 공급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극좌의 학생들이 26.8%를 차지했다. 한편 정부 용자에 의한 자가 소유율을 높여야 한다는 중도우의 복지의식은 26.2%의 지지를 받았으며 주택문제 해결에 정부의 개입을 선호하지 않는 비율은 1.5%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어떤 형태로서든 임대주택의 확대 보급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었다.

전체 18개 항목들 중 8번째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이 〈표 16〉이 보여주는 빈부 격차의 정도에 대한 인식으로서 평균 점수 2,908을 기록했다. 응답자의 반이 넘는 53.1%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봄으로서 중도좌의 성향을 띠고 있으며 25.4%는 중도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약간 우려할 정도라고 답했

〈표 16〉 우리나라의 빈부격차 정도

가중치	구 분	표본수	백분율
1	안 실 할 수 준	15	1.8
2	약간 우려 할 정도	216	25.4
3	심 각 한 수 준	452	53.1
4	해 결 불 가 능	168	19.7
0	무 응답	1	0.1
합 계		852	100.0
평 균		2,908	

다. 극좌의 해결 불가능과 같은 비판적 견해는 19.7%였고 1.8%는 안심해도 팬찮다는 극우의 견해를 표시했다.

그 다음으로 노인의 소득보장 방법에 대한 질문은 평균 점수 2,788로 나왔는데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의 66.3%가 중도좌에 소속하는 국민복지연금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가 하면 10.4%는 극좌의 무상 연금의 실시를 원했고, 14.4%는 기업복지의 일환으로 노령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서 중도우에 속했다. 반면 나머지 8.6%는 노령빈곤의 극우 해결책인 개인 책임을 주장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의 개입 필요성을 거부하고 있었다.

<표 18>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3대 중요가치에 대한 질문 결과이다. 평균 점수는 2,761로 나왔는데, 이는 전체 18개 항목들의 평균치 2,746에 가장 근접한 점수로 판명되었다. 응답자의 57.0%가 중도좌로 간주할 수 있는 左의 가치 2개와 右의 가치 1개를 선택했으며, 새마을 운동의 3대 정신(근면, 자조, 협동)과 같이 중도우에 속하는 右의 가치 2개와 左의 가치 1개를 택

<표 17> 노인의 소득보장 방법

가중치	구 분	표본수	백분율
1	자신이나 가족의 책임	73	8.6
2	기업의 퇴직금제도를 국가가 장려	123	14.4
3	사회보험에 입각한 국민의 연금제도 실시	565	66.3
4	조세에 의한 무상 연금 지급	89	10.4
0	무응답	2	0.2
합 계		852	100.0
평균		2,788	

<표 18> 3대 중요 가치

가중치	구 분	표본수	백분율
1	우 3	19	2.2
2	우 2 좌 1	250	29.3
3	우 1 좌 2	486	57.0
4	좌 3	85	10.0
0	무응답	12	1.4
합 계		852	99.9
평균		2,761	

한 학생들은 29.3%를 차지했다. 양 극단의 경우를 보면 左의 가치 3개를 선택한 극좌의 학생들이 10.0%인 반면 2.2%가 극우인 右의 가치 3개를 선호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설명한 10개 항목들은 각 항목의 평균 점수가 전체의 평균치 보다 높게 집계된 것들이었다. 이제 전체 평균 점수보다 낮은 8개 항목들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전체 평균치 보다 낮은 점수를 얻은 8개 항목들 중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기록한 것이 의료 전달체계의 도시 집중화 해결 방안에 관한 질문이었다. <표 19>에서와 같이 평균치는 2,671이었는데, 응답자의 절반이 49.9%가 중도좌의 이념에 속하는 농촌 지역에 국립 의료기관의 확대를 원했으며 35.2%는 중도우에 속하는 자유 개업의사들에 대한 물질적 동기 부여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의료기관의 국유화와 같은 극좌의 선택은 10.3%로 나타났고 극우의 현상유지인 자유 개업의 제도의 지속적 시행을 선호하는 비율은 3.9%였다.

<표 19> 의료 전달 체계의 도시집중화 해결방안

가중치	구 분	표본수	백분율
1	의사의 수를 늘리면서 자유개업 지속	33	3.9
2	자유개업 의사들에 대한 물질적 동기부여	300	35.2
3	농촌지역에 국립의료기관 신설	425	49.9
4	의료기관의 국유화	88	10.3
0	무응답	6	0.7
합 계		852	100.0
평 균		2,671	

<표 20> 청소년 비행 대책

가중치	구 분	표본수	백분율
1	학교와 부모에 의한 선도	76	8.9
2	청소년 복지시설 확대	442	51.9
3	부의 불평등 구조 개선	23	2.7
4	사회경제체계 변화	307	36.0
0	무응답	4	0.5
합 계		852	100.0
평 균		2,662	

청소년 비행의 대책으로서는 <표 20>이 말해주듯이 응답자의 51.9%가 중도우에 속하는 청소년 복지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부의 불평등 구조의 개선을 청소년 비행의 예방책이라고 반응한 중도좌의 비율이 2.7%였던 반면 학교와 부모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부가하는 극우의 견해가 8.9%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극좌적인 사회, 경제 체제의 변화를 청소년 비행의 예방책으로 믿는 학생들이 36.0%로 높게 나온 결과 평균치는 2,662가 되었다.

단위 항목의 평균 점수가 중도좌에 속하는 12개 항목들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이 <표 21>의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질문한 항목으로 2,599의 평균 점수를 획득했다. 전체 응답자의 48.2%는 중도우에 가깝게 양자를 모두 중시하면서도 자유가 평등에 우선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35.7%는 꺼꾸로 평등이 자유에 우선된다고 믿음으로서 중도좌에 속하고 있었다.

<표 21> 자유와 평등의 관계

가중치	구 분	표 본 수	백 분 율
1	양자는 공존 불능 자유만 보장	18	2.1
2	자유의 기반위에 평등 구축	411	48.2
3	평등이 자유에 우선	304	35.7
4	평등이 보장되면 자유는 자동해결	109	12.8
0	무 응답	10	1.2
합 계		852	100.0
평 균		2,599	

한편 자유만을 중시하는 극우는 2.1%의 지지를 받았고 반대로 평등만을 중시하는 극좌는 12.8%를 기록했다.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전체 18개 항목들 중 중도우에 속하는 항목은 5개였는데 이들 중 가장 높은 평균치는 <표 22>의 실업문제 해결책에 관한 항목이 차지했다. 평균 점수는 2,491이었는데, 응답자의 절반인 50.0%가 노사 협의체를 국가가 주도하는 중도좌의 소위 조합식복지국가(the cooperatist welfare state)를⁽¹²⁾ 찬동했으며 22.1%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최선책으로 보는 중도우의 해결책을 선호했다. 한편 자본주의의 철폐를 실업문제의

(12) Ramesh Mishra, "The Welfare State in Crisis," Wheatsheaf, Brighton, 1984, Ch.4.

〈표 22〉 실업문제 해결책

가중치	구 분	표본수	백분율
1	노사양측의 문제로 제3자 불개입	141	16.5
2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고용확대	188	22.1
3	노사협의체를 국가가 주도	426	50.0
4	자본주의 철폐	57	6.7
0	무응답	40	4.7
합 계		852	100.0
평 균		2,491	

〈표 23〉 실업 문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가중치	구 분	표본수	백분율
1	정부 개입 불필요	12	1.4
2	수요관리와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개입	628	73.7
3	완전 고용을 법제화	38	4.5
4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변혁	166	19.5
0	무응답	8	0.9
합 계		852	100.0
평 균		2.424	

해결책으로 보는 극좌는 6.7%인데 반해 실업문제를 노사 간의 문제로만 보는 극우의 성향을 띤 응답자가 16.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동일 문항에 서 극우의 성향이 극좌의 그것 보다 우세하게 집계된 항목은 〈표 22〉 외에 다음에 나올 〈표 24〉와 〈표 26〉 등 3개 항목이었다.

이어서 〈표 23〉은 실업의 대책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평균 점수는 2.424를 기록함으로써 앞에 나온 〈표 22〉의 실업문제 해결책과 거의 같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자의 73.7%는 수요 관리와 경제 안정의 목적을 위해 실업 문제에는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도우의 케인즈식 완전고용 정책을 선호했다. 그러나 완전고용을 제도화하는 중도좌의 견해에 대해서는 4.5%의 낮은 지지를 보였고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실업 문제는 해결 불가능으로 생각하는 극좌의 견해가 19.5%로 나타났는가 하면, 1.4%는 실업 문제 해결에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극우의 반응을 보였다.

토지의 사유권에 대한 의식은 〈표 24〉에서와 같이 평균 점수 2.288이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54.9%가 원칙적으로 사유권을 인정하지만 필요시 국가에

〈표 24〉 토지의 사유권 인정 정도

가중치	구 분	표본 수	백 분율
1	신성불가침의 절대 권리	88	10.3
2	사유권의 원칙적 인정 그러나 국가의 유보도 가능	468	54.9
3	원칙적으로 사유권 불인정 그러나 예외도 인정	248	29.1
4	사유권 불인정	42	4.9
0	무응답	6	0.7
합 계		852	100.0
평균			2.288

의한 유보도 가능하다고 보는 중도우의 성향을 띠고 있는 반면, 29.1%는 사유권의 원칙적 인정이 아닌 예외적 사유권만을 원하는 중도좌에 속했고 토지 사유권의 불인정과 같은 극좌는 4.9%였다. 여기에서 극좌가 얻은 4.9%는 전체 18개 항목들의 극좌 비율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다. 한편 토지의 사유권을 신성 불가침의 절대 권리로 생각하는 극우의 견해는 10.3%였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 대로 〈표 24〉는 전체 18개 항목들 중 극좌의 비율이 극우의 그것보다 약세를 보인 3개 항목 중의 하나이다.

사회복지 활동의 주체와 관련된 질문은 〈표 25〉와 같이 2,281의 평균 점수를 획득했는데 자선 활동을 중점적으로 확대할 것을 원하는 극우의 의식은 2.8%였고, 반대로 자선 활동을 축소시키는 대신 국가의 복지 활동을 확대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보는 극좌의 견해가 7.2%로 양극단의 견해는 10%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73.0%라는 압도적 수자의 응답자들은 민간과 국가의 양 주체를 공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중도우로 나타났으며, 나

〈표 25〉 국민의 복지함상을 위한 대책

가중치	구 분	표본 수	백 분율
1	자선활동의 확대 및 국가의 복지활동 감소	24	2.8
2	자선활동과 국가의 복지정책 동시 확대	622	73.0
3	자선활동 현상유지 국가의 복지정책 확대	140	16.4
4	자선활동의 감소 및 국가의 복지 활동 확대	61	7.2
0	무응답	5	0.6
합 계		852	100.0
평균			2,281

마지 16.4%는 자선 활동을 현재만큼 해두고 국가의 책임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중도좌에 속했다.

끝으로 18개 전체 항목 중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기록한 것이 대학의 개혁 방안에 관한 질문이었다. <표 26>이 집계한 바와 같이 평균치는 2,169였다. 응답자의 42.7%가 전 대학의 사립화를 주장함으로써 18개 항목들 중 극우의 복지의식이 일어낸 최대 응답 비율이었다. 반대로 전 대학의 국립화와 무상 교육과 같은 극좌의 개혁안을 선호한 비율이 10.3%였기 때문에 <표 26>은 18개 전체 항목에 걸친 설문들 중 극좌보다 극우가 우세한 3개 항목 중의 하나가 되었다. 한편 우수 빈곤 학생들을 위한 국비 무료 쿼터의 실시를 원하는 중도좌의 지지율은 38.3%로 밝혀졌고, 현제도에 만족하는 중도우는 4.6%로 집계되었다.

<표 26> 우리나라 대학의 개혁 방안

가중치	구 분	표본 수	백분율
1	전대학의 사립화	364	42.7
2	현 제도에 만족	39	4.6
3	우수 빈곤 학생의 국비무료 쿼터 실시	326	38.3
4	전대학의 국립화, 무상교육	88	10.3
0	무응답	35	4.1
합 계		852	100.0
평 균		2,169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고찰한 18개 항목들을 앞서 연구 방법에서 설명한 10개 부문으로 묶어보면 빈곤에 관한 항목들은 <표 11>, <표 12>와 <표 16>이며, 의료에 관한 것이 <표 10>과 <표 19>이다. 주택 및 토지에 관련된 항목은 <표 15>와 <표 24>이고 <표 14>, <표 17>과 <표 20>은 청소년, 노인 및 장애자 복지에 관련된 항목들이며, 교육부문은 <표 26>, 사회복지의 주체에 관한 것이 <표 25>이다. 그리고 복지예산에 관련된 항은 <표 9>, 사회개혁에 관한 것이 <표 13>이며 사회가치에 관한 항목이 <표 18>과 <표 21>로 분류할 수 있겠다. 이상 10개 부문을 평균 점수가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순으로 정렬한 것이 <표 27>이다.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이념의 연속선 상에서 중도좌는 2.51~3.25의 점수권에 위치하는데, 중도좌의 중위 점수는 2.88이 된다. 따라서 <표 27>

〈표 27〉 부문별 평균 점수

부문	평균 점수	이념
복지예산	3.507	극좌
빈곤	3.025	
사회개혁	2.981	
의료	2.920	
청소년, 노인, 장애자 복지	2.799	중도좌
사회가치	2.757	
주택	2.615	
실업	2.402	
사회복지주체	2.281	중도우
교육	2.169	

을 보면 복지 예산 부문, 빈곤 부문, 사회개혁 부문과 의료 부문 등 4개 부문이 비교적 좌편에 기울어져 있는 반면 청소년, 노인 및 장애자 복지 부문, 사회가치 부문과 주택 부문 등 3개 부문이 중간에 위치했다. 실업 부문, 사회복지의 주체 부문과 교육 부문 등 나머지 3개 부문은 상대적으로 우편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설명된 조사 결과의 분석은 본 연구의 주 목적인 대학생들의 복지이념 측정을 단순 빈도와 가중치에 의한 평균 점수의 산출에 관한 내용들이었다. 이제 본 연구의 부차적 목적인 복지 이념의 상이성에 미치는 변수들을 발견해보기로 하겠다. 상관관계의 측정은 T-test와 ANOVA를 사용하여 유의도를 검증했는데 결과 분석 중 유의미하다는 것은 유의 수준 5% 이내에서 상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조사표의 일반 사항에 나와 있는 독립 변수들은 대학교, 전공, 학년, 성, 출신 고교의 소재지, 父의 경제적 수준, 父의 교육 수준 그리고 종교와 같이 총 8개 였다. 이들 중 대학교의 상이성이 복지이념의 상이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은 그 결과의 발표가 야기할 수도 있는 부작용을 고려한 끝에 금번 조사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일 높은 평균치를 기록한 대학교의 평균점수는 2,848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는 2,682였다는 사실만 참고로 밝혀 둔다.

나머지 7개의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를 측정한 결과 〈표 28〉과 같이 출신 고교의 소재지와 종교의 2개 변수는 무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변수는 학년, 전공, 성, 父의 생활 수준과 父의 교육

〈표 28〉 유의미한 변수

변 수	구 分	평 균 점 수	p=
학 년	1 학 년	2.723	0.006
	4 학 년	2.777	
전 공	예 체 능	2.665	0.000
	이 과	2.706	
	문 과	2.790	
성	여	2.715	0.005
	남	2.766	
父의 생 활 수준	하	2.844	0.000
	중	2.731	
	상	2.662	
父의 교육 수준	무	2.607	0.011
	국 졸	2.784	
	중 졸	2.809	
	고 졸	2.767	
	대 졸	2.725	

수준 등 5개로 최종 집계되었다.

먼저 학년을 보면 4학년이 1학년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좌편으로 기울게 된다는 의미이며, 전공에서는 예, 체능계 대학생들이 이과보다 우에 가깝고 이과학생들은 문과 학생들에 비해 또 우에 가깝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 차이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좌편에 서 있고, 父의 경제적 수준에서는 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우경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끝으로 父의 교육 수준에서는 중졸이 제일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 학력 무와 대학 이상의 고학력 즉 양극 단이 국졸, 중졸 및 고졸과 같은 중위권 교육 수준에 비해 우경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방금 설명한 상관 관계를 좀 더 세분화하기 위해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보인 5개의 변수와 앞에서 설명한 복지이념의 10개 부문 중 사회가치, 사회 개혁 및 복지 예산 부문을 제외시킨 사회정책의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한 7개 부문과 연계시켜본 것이 〈표 29〉에 나와 있다. 이를 보면 부문별 상관관계는 다양하게 나왔는데 학년이란 변수는 빈곤, 주택 및 사회복지 주체 등 3개 부문과는 유관하지만 나머지 4개 부문과는 무관했다. 전공은 의료와 실

〈표 29〉 변수와 부문간의 상관관계 유무

부문 변수	빈 곤	의 료	청소년, 노인, 장 애자복지	주 택	실 업	교 육	사회복지 주 체
학년	유(0.004)	(0.613) 무	유(0.003)	(0.067) 무	(0.987) 무	(0.673) 무	유(0.007)
전공	유(0.000)	(0.503) 무	유(0.006)	유(0.002)	(0.121) 무	유(0.033)	유(0.010)
성	유(0.032)	(0.822) 무	유(0.004)	유(0.034)	유(0.032)	(0.915) 무	(0.488) 무
父의 생활수준	유(0.002)	(0.491) 무	유(0.010)	(0.095) 무	(0.076) 무	유(0.001)	유(0.013)
父의 교육수준	(0.458) 무	(0.678) 무	(0.303) 무	(0.068) 무	유(0.003)	(0.272) 무	(0.560) 무

()안 수자는 5% 유의도 수준에서의 p값.

업 부문과 무관하고 나머지 5개 부문과는 유관했으며, 성은 의료, 교육 및 사회복지의 주체 부문 등 3개 부문과 무관했다. 父의 생활 수준은 의료, 주택 및 실업 부문과 무관했고 父의 교육 수준은 실업 부문에만 유관했을 뿐 나머지 6개 부문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의료 부문이 5개의 변수와 전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전체 평균치에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가 5개로 밝혀졌지만, 5개의 모든 변수가 전체 18개 항목의 개개 항목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되겠다.

V.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복지 의식의 측정을 주 목적으로 설문 조사를 시도했다. 극우에서 중도우와 중도좌를 거쳐 극좌에 이르는 4분법 복지 모형에 따른 복지 이념의 연속성을 가상했을 때 1984년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중도우에 가까운 중도좌에 속한 복지 의식을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조사 대상이 서울 지역에 위치한 5개 대학교의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들에까지 일반화시킬 수 있는가에 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금번 조사에서 결과의 일부만이 공개된 대학별 의식 차이를 고려해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복지 의식을 온전한 중도좌로 결론짓는 데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복지모형이 중도좌에 속한다는 본 조사의 결과를 국민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되었던 1979년 김영모 교수의 복지 의식 조사와⁽¹³⁾ 비교할 때 대학생들의 복지 이념이 국민 전체의 그것보다 좌편으

(13) 金泳謨, op. cit., p. 104.

로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진⁽¹⁴⁾ 우리나라 영세민들의 낮은 복지 의식과 대학생들의 높은 복지 의식 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체 항목의 평균치가 중도좌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사회 정책의 제 영역들 중 세분화된 개별 영역에 대한 복지 의식은 상당한 편차를 보여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사회복지 예산의 부족 현상이나 빈곤 문제, 사회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의료 보장에 관한 부문들이 실업 문제나 사회복지의 주체 선정이나 교육 보장에 비해 더 높은 복지 의식의 표출을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현 사회 정책과 관련하여 대학생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어느 부문에 더 많이 주어지고 있으며 정책 과제의 최우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시사해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사회 문제의 발견이나 원인 분석의 측면이 문제 해결의 대책 면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사실은 대학생들이 이상 지향적 사고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즉 정책 과정을 통해 문제의 발견 및 분석과 같은 초기 단계에서 대책의 강구 및 시행의 후기 단계로 진행되면서 이념의 稀釋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 경향인데,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대책에 필수적인 자원 조달이라는 현실적 난제를 감안하면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경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조사 결과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사회개혁의 주요 수단으로서는 사회복지 예산의 대폭 증대를 강조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국가를 향해 취약 계층에 대한 더 무거운 보호의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소득, 부, 권력 및 지위 등의 재분배가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현 대학생들의 복지 이념만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국가의 주역이 될 때 사회복지의 확대전망은 밝을 것이라는 속단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그들이 갖고 있는 복지 의식이 대학 졸업 후에 변화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으며, 또한 그들이 직접 사회정책의 결정에 적면했을 때 감안해야 할 여타 사항들이—예를 들면 경제사정, 사회, 정치 및 안보 상황 등—역시 유동적이다. 따라서 현 대학생들의 복지 의식이 중

(14) 한국개발연구원, op. cit., p. 119, 金泳謨, '영세민의 생활실태와 복지대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최, 제 3회 전국 사회복지대회, 발표논문, 1985. p. 33.

도좌라고 해서 앞으로의 우리나라 사회정책이 반드시 중도좌의 성향을 띠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극히 단순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꼴으로 대학생들의 상이한 복지 이념에 미치는 변수들을 고려할 때 종교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던 사실은 유독 대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현상이라기 보다 우리나라 국민의 가치에 관한 연구들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 경향과 일치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출신학교 소재지 역시 무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육이 강한 통일성을 띠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대학생들의 일반적 복지 의식을 차이나게 하는 유의미한 변수들은 학년, 성, 전공, 父의 경제 수준 그리고 父의 교육 수준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사회정책의 개개 영역과 상관시켰을 때, 5개의 변수들 모두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개 영역별 복지 의식의 상관 변수는 전체 복지 의식의 상관 변수를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VI. 부 록

大學生의 福祉 理念에 關한 調査

참고 : 1문 1답으로 하되, 문항 8번만 세가지로 답해 주십시오.

일반사항

1. _____ 대학교 _____ 대학 _____ 학과 _____ 학년
2. 성별
_____ 1) 남 _____ 2) 여
3. 출신고교 소재지
_____ 도 _____ 시 _____ 군
4. 父의 경제적 수준
_____ 1) 상 _____ 2) 중 _____ 3) 하
5. 父의 교육수준
_____ 1) 무학 _____ 2) 국졸(퇴) _____ 3) 중졸(퇴)
_____ 4) 고졸(퇴) _____ 5) 대졸(퇴) 이상
6. 종교
_____ 1) 불교 _____ 2) 기독교 _____ 3) 천주교
_____ 4) 무 _____ 5) 기타

1. 현재 우리나라의 빈부 격차는 ?
 - _____ 1) 해결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하다.
 - _____ 2) 약간 우려할 정도이다.
 - _____ 3) 안심해도 괜찮은 수준이다.
 - _____ 4) 심각한 수준이다.
2. 오늘날 우리나라의 빈곤 원인에 대한 설명 중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은 ?
 - _____ 1) 저임금, 고용기회 부족, 사회보장제도의 미발달이 원인이다.
 - _____ 2) 개인의 동기 부족, 나태, 무절제에 기인한다.
 - _____ 3) 가구주의 사망, 질병, 저학력, 정년퇴직 등이 주원인이다.
 - _____ 4) 자본주의 체제의 내재적 모순과 같은 근본적 원인에 기인한다.
3.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 _____ 1) 튼튼한 자유의 기반 위에 평등이 구축될 수 있다.
 - _____ 2) 자유와 평등은 함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자유를 선택해야 한다.
 - _____ 3) 평등은 자유에 우선하지만 그렇다고 자유가 무시되지는 않는다.
 - _____ 4) 평등이 보장되면 자유는 자동적으로 수반된다.
4. 귀하가 보는 현재의 우리 사회는 ?
 - _____ 1) 만족스런 정도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회개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 _____ 2) 약간의 사회개혁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회문제는 그렇게 고질적이고,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_____ 3)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점진적으로 사회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_____ 4) 사회개혁으로서 문제 해결이 가능한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혁명 외에는 구제 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5. 의료 전달체계(병·의원, 약국)의 도시집중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귀하의 이상적 방안은 ?
 - _____ 1) 의사의 수를 늘리고 자유 개업주의를 지속하면 자연적으로 해결 된다.
 - _____ 2) 국립 의료기관을 농촌지역에 중점적으로 설치, 운영한다.
 - _____ 3) 자유 개업의들의 농촌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혜택(특히 물질적 incentives)을 부여한다.
 - _____ 4) 대부분의 의료기관을 국립화하여 강제적으로 분산시킨다.
6. 재정 능력이 없는 무주택자의 주택문제 해결의 이상적 방안은 ?
 - _____ 1) 국가 응자나 보조금을 통해 무주택자 중 재정 능력이 큰 사람부터 자기 소유 주택을 마련하도록 해준다.
 - _____ 2)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나 사회는 개입할 수 없다.
 - _____ 3) 재정부담 능력이 가장 약한자부터 정부 소유의 임대주택을 무료로 공급한다.

- _____ 4) 재정능력이 가장 부족한 사람부터 유료임대주택을 정부가 공급 한다.
7. 다음과 같은 대학 개혁안중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은?
- _____ 1) 모든 대학을 사립화하고 대학의 재정, 학사, 운영 일체에 국가는 간섭 않는다.
 - _____ 2)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 별다른 개혁이 필요없다.
 - _____ 3) 빈곤 우수 자녀에 대해서는 일정 퀴타(quota)를 두어 국비 무료로 교육시킨다.
 - _____ 4) 전 대학 국립화, 국가고시실시, 조세에 의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8.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음의 가치들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 개를 택 하시오.
- _____ 1) 자유(Freedom)
 - _____ 2) 지위의 평등(Equality of Status)
 - _____ 3) 자조(Self-help)
 - _____ 4) 윤리 도덕(Morals) 준수
 - _____ 5) 동포애(Fraternity)
 - _____ 6) 근검(Thrift)
 - _____ 7) 부의 평등(Equality of Wealth)
 - _____ 8) 박애(Philanthropy)
 - _____ 9)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
 - _____ 10) 협동(Cooperation)
 - _____ 11) 자선(Charity)
 - _____ 12)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
 - _____ 13)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
 - _____ 14) 자립(Independence)
9. 우리나라의 실업문제와 관련하여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은?
- _____ 1) 실업은 개인의 문제이므로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 _____ 2) 현 자본주의 체제는 실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체제의 변혁이 필요하다.
 - _____ 3) 완전 고용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 _____ 4) 완전 고용정책은 수요관리와 경제안정 정책이므로 국가의 정책으로 책임하는 것이 좋다.
10. 우리나라 노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주된 방법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1) 조세에 의한 재원으로 무상의 연금을 지급한다.
 - _____ 2) 기업의 퇴직금제도를 국가가 적극 장려한다.
 - _____ 3) 가족내에서 해결하거나, 자신이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 _____ 4) 사회보험원칙에 입각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11.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은 다음중 어떤 방식을 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국가에 의한 의료보험의 방식으로 해결한다.
- 2) 세금을 통해 의료욕구가 있는 자는 누구에게나 혜택이 가도록 한다.

- 3) 의료문제는 개인의 문제이니까 전적으로 개인 부담이다.
- 4) 극빈자의 경우에만 국가나 사회가 책임진다.

12. 토지의 사유권을 어느정도 인정하십니까?

- 1) 신성 불가침의 절대적 권리로 인정한다.
- 2) 원칙적으로 토지는 공동 소유지만 토지 이용의 효율면이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만 사유권을 인정한다.
- 3) 토지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만인의 공동 소유이므로 사유권을 인정 할 수 없다.
- 4) 사유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경우에 따라서 국가가 유보시킬 수 있다.

13. 실업 사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 1) 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조업중단을 방지한다.
- 2) 실업 사태를 영구적으로 없애려면 자본주의를 없애야 한다.
- 3) 노사 양측이 해결하도록 제 3자는 내버려 둔다.
- 4) 정부의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노사협의체를 국가가 주도한다.

14. 정부의 영세민 대책의 주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취업기회 확대
- 2) 소득 분배의 불균형 시정
- 3) 자립의지 조성 및 의타심 방지
- 4) 최저 생계유지

15. 우리나라의 장애자 복지나 노인 복지를 위한 이상적 방안은?

- 1) 개인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둔다.
- 2) 보다 많은 세금을 확보하여 무상 서비스를 확대한다.
- 3) 장애자 고용 촉진법 및 퇴직금 제도의 강화와 같은 방법을 강구 한다.
- 4) 기부나 자선이 증가되도록 사회운동을 벌인다.

16. 중·고등학생의 유흥비 마련을 위한 각종 비행을 완화시키기 위한 이상적 방안은?

- 1) 부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한다.
- 2) 학교와 부모가 합심하여 개별적으로 선도한다.
- 3) 소비 성향과 물질 만능주의를 자극하고 있는 사회경제체제를 변화 시킨다.
- 4) 청소년들의 건전한 오락시설을 확대하고 그들의 비행을 조장하는 업소를 제한한다.

17. 국민 복지의 향상을 위해 민간의 자발적 자선활동과 국가의 복지 활동의 역할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1) 자선활동은 현재정도 해 두고 국가의 복지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_____ 2) 자선활동을 확대시켜 국가의 복지활동을 필요없게 해야 한다.
_____ 3) 자선활동도 확대시키고 국가의 복지활동 역시 확대시킨다.
_____ 4) 자선활동은 감소시키고 국가의 복지활동을 확대시켜 나간다.
18. 현재 우리정부가 사회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정부 예산은 지금의 우리 실정에 비추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__ 1) 적정 수준이다.
_____ 2) 과잉 지출이다.
_____ 3) 극히 부족이다.
_____ 4) 약간 부족이다.

—대단히 감사합니다.—